



토론회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⑦>

대선공약을 통해 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 일 시 | 2017년 3월23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순화동 소재)

| 주 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 회 순 ————■

사 회

- 최 창 규 (명지대 교수)

주 제 발 표

-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토 론

-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김 현 중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 문 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김 영 훈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제실장)

질의·응답

폐 회



■————— 목 차 —————■

주 제 발 표

“대선공약과 재정건전성”

-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토 론

-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김 현 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 문 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김 영 훈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경제실장)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⑦>
대선공약을 통해 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주제발표

대선공약과 재정건전성

오 정 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 보다는 정치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섰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고 침묵하는 다수가 무시되는 비민주성을 내포하게 된다. 심지어 이들을 이용하여 포퓰리스트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이른바 디지털 포퓰리즘에 토대를 둔 사이버민주주의의 비민주적 위험성이다.

뿐만 아니라 설혹 다수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하더라도 속성상 전체보다는 개인, 장기적 안목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개개인 선의 합이 전체적이고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국가전체의 공동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정부제공 사회서비스나 현물급여 등 복지혜택은 많이 받을수록 개개인에게는 선이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정파탄 등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2011년 발생

한 남유럽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대의민주주의를 창출한 것이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의 예처럼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긴 차선택이 아니다.

또한 대중선동과정에서는 합리적 이성과 건전한 상식에 의한 판단보다는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충동이 앞서게 된다. 서민대중의 고통은 소수의 지배계급 때문이라는 단순화된 여론몰이식의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충동으로 대중을 선동한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에서 일반 대중은 오히려 단순하고 감성적인 충동을 앞세우는 선동가가 조작하는 여론에 의해 지배되고 조종되게 된다. 결국은 선동적인 포퓰리스트의 비민주적 지배체제가 강화되고 서민대중 고통해소는 요원하게 된다. 합리적 이성과 건전한 상식이 지배하지 않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다. 플라톤이 지적한 중우정치에 빠질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포퓰리스트 통치 결과 경제파탄을 초래하여 극좌정권이 등장하거나 쿠데타로 극우정권이 등장한 사례는 허다하다. 결국 이론적으로나 역사적 경험으로나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포퓰리즘 추방을 위해서는 우선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 포퓰리즘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언론 시민단체에서는 엄정한 잣대로 민주주의를 위장한 포퓰리즘 공약들을 걸러내어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엄정한 법치를 시행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 장치도 강구해야 한다.

이번 대선정국에서도 예외 없이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는 정책들이 포퓰리즘인가 아닌가는 다음 몇 가지 기준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재정지속가능성 여부다. 포퓰리즘은 퍼주기로 인기를 얻으려고 한 나머지 과도한 재정지출로 재정이 지속 불가능하게 되어 심할 경우에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 둘째, 근로동기 없이 그냥 퍼줌으로써 근로유인을 저하시키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킨다. 셋째, 사회통합보다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 부자 대 빈자, 강자 대 약자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며 본인들은 사실은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양 행세한다. 이런 여러 기준으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이 포퓰리즘인지 아닌지 구분해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재정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현재 까지 발표된 주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해 본 것이 다음의 표이다.

이 표를 보면 후보들은 주로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서 재원조달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된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들을 보면 유승민 후보가 복지에서 8조원, 남경필 후보가 복지에서 2조원, 일자리에서 2조원, 안철수 후보가 일자리에서 6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에서 24조원, 복지에서 3조원,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에서 18조원, 복지에서 4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공약에서 24조원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공약한 데 따른 것이며 이재명 후보의 복지 43조원은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따른 것이다.

【표 1】 대선후보 정책 요약

	유승민(바른정당)	남경필(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성장	▶혁신성장 ▶성장, 분배 모두 중요	▶성장, 분배 모두 중요	▶공정성장	▶국민성장 ▶분배우선	▶혁신성장	▶분배우선
일자리		▶기본근로 ▶연 2000만원 한국판 뉴딜 10만개 ▶소요예산 연간 2조원 ▶‘플랫폼 도시’를 전국 10개 조성 ▶양질의 일자리 30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반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국가임금직무혁신위원 회 설치 및 국가 자격제 도 정비 ▶노동시간 단축 ▶평생교육을 통한 직원훈련 체계 혁신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및 신성장산업·첨단 수출중소기업 육성	▶공무원+공기업 81만개 ▶근로시간단축 50만개 ▶공공부문 81만개(24조) ▶공무원 17만개(4.2조) ▶고용예산(17조) 우선순위 조정	▶민간기업역할도 중요 ▶R&D투자 전폭지원 ▶혁신중소기업 일자리창 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60만 정규직 전환 ▶약 18조원 ▶민간부문 60만개 ▶청년의무고용 5%까지 확대
노인				▶치매국가책임제 ▶본인부담상한제 ▶경증치매 장기요양보험혜택		
기초노령연금				▶70만 명*연 1200만원 =8400억 원 ▶치매 1인 현재 요양비 외 추가개인부담	▶단계적 인상	

	유승민(바른정당)	남경필(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육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0~23개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 20만원(0~11개월)과 15만원(12~23개월)에서 40만원씩으로 인상 ▶23~35개월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추가소요예산 약2조원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등 공공보육시설 현재 28%→70%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양육수당제 ▶2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책임제 ▶2조+α? ▶공공보육시설 40%로 확대 		
아동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교~고교 1인당 월 10만원 ▶소요예산 6조원 ▶초등학교 돌봄기능 보충 ▶학교시간 오후 4시로 늦춰 인문, 예체능, 영어교육 등 ▶사교육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세이하 월 10~30만원 ▶소요예산 5.6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상교복 1인당 290,890원 ▶중학교신입생과 저소득 고교신입생 아동수당 연 100만원 ▶소요예산 8.9조원
저출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3년 ▶산후조리비용 300만원 건강보험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급여 현재 월급 40%→최초 3개월 80%, 4개월부터 50% ▶초교입학전 오전10to오후4 임금감소없이 노동시간 단축 ▶중기임금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후조리지원금 ▶50만원 상남서양상품권 지급
기초생활수급제					▶수급인원조정	

	유승민(바른정당)	남경필(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						▶생애주기별 연 100만원 ▶43조원 소요 ▶재정지출 구조조정 ▶세율인상 ▶국토보유세 부과
국민연금	▶최저연금액 인상 ▶현 월평균 36만원 → 80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률 인하: 현 36.8% → 20% ▶본인부담률 상한제 대 상 확대: 현 1% → 10%					
중소기업	▶강소기업(구 새누리당)	▶강소기업(구 새누리당)	▶임금 대기업 80% 수준까지 정부보전 ▶2년간 월 50만원 지원 ▶청년실업예산 2.4조원 절반 사용			
임금	▶최저임금 연15% 인상. 2020년 1만원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청년			▶직업훈련청년 6개월 간 월 30만원 ▶3조6천억 원 소요 ▶청년실업예산 사용			▶청년수당 연 100만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세금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고소득자 소득세, 고액 상속세, 자본이득세, 법인 세 실효세율 순으로 인상		▶대기업 440개 법인세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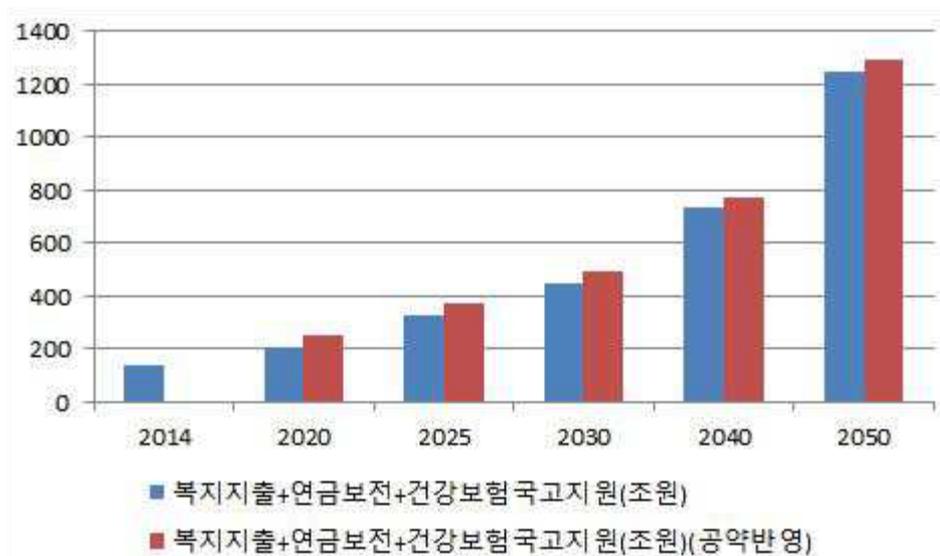
	유승민(바른정당)	남경필(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농어촌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 (민주당)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 (민주당)	▶1조원 농어촌 상생기금 (민주당)
사회적경제 기본법	▶19대국회 발의			▶국회처리 (4월까지, 민주당)		
가계부채				▶203만명 22조원 탕감 (국민행복기금 103만명 11조 대부업체 100만명 11조) ▶재원 1000억 ▶가계부채총량관리제도 도입 ▶대부업이자율 20%로 인하		
4차산업혁명	▶창업생태계 조성	▶주입식교육 타파	▶민간주도혁신 추진 교육부 폐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립	▶민간위주 혁신연구개발 거버넌스 개편	
재벌개혁	▶출자총액제도 강화 ▶기업총수사면 복권금지 ▶계열사업감몰아주기 전면차단 ▶재벌개혁 대중소기업 상생생태계 조성 ▶공정위전속고발권 폐지	▶재벌경제력집중억제 ▶지주회사 전환유도 ▶지배구조투명화	▶계열분리명령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삼성, 현대차, SK, LG 4대 재벌 집중개혁 ▶집중투표제 등 상법개정	▶순환출자 금지 ▶자사주의결권 제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재벌독점적 지위개혁	▶노동이사제 ▶재벌초과이익 환수 ▶재벌체제해체 ▶조직범죄재산물수법 제정
부동산	▶LTV, DTI 규제강화	▶안정화 필요	▶후분양제 시행 ▶점진적 안정화 필요	▶재산세, 종부세 인상 ▶하향안정책 필요	▶하향안정책 필요	▶국토보유세 ▶연착륙위해 DTI유지
전월세				▶전월세상한제(민주당) ▶계약갱신청구권(민주당)	▶전월세상한제(민주당) ▶계약갱신청구권(민주당)	▶전월세상한제(민주당) ▶계약갱신청구권(민주당)
국방		▶모병제 ▶30만명*연 3천만원=9조원				

	유승민(바른정당)	남경필(바른정당)	안철수(국민의당)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안희정(더불어민주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소요예산	▶8조원+ α +국민연금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시기 앞당겨	▶13조원+ α	▶6조원	▶32.3조원+ α		▶61조원+ α
구성	복지 8조원	모병제 9조원 일자리 2조원 복지 2조원	일자리 6조원	일자리 24조원 복지 8.3조원		일자리 18조원 복지 43조원+ α

이러한 포퓰리즘 공약이 한국의 재정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직 자세한 공약들이 나오지 않아서 보다 정확한 계량화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공약에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소요액을 토대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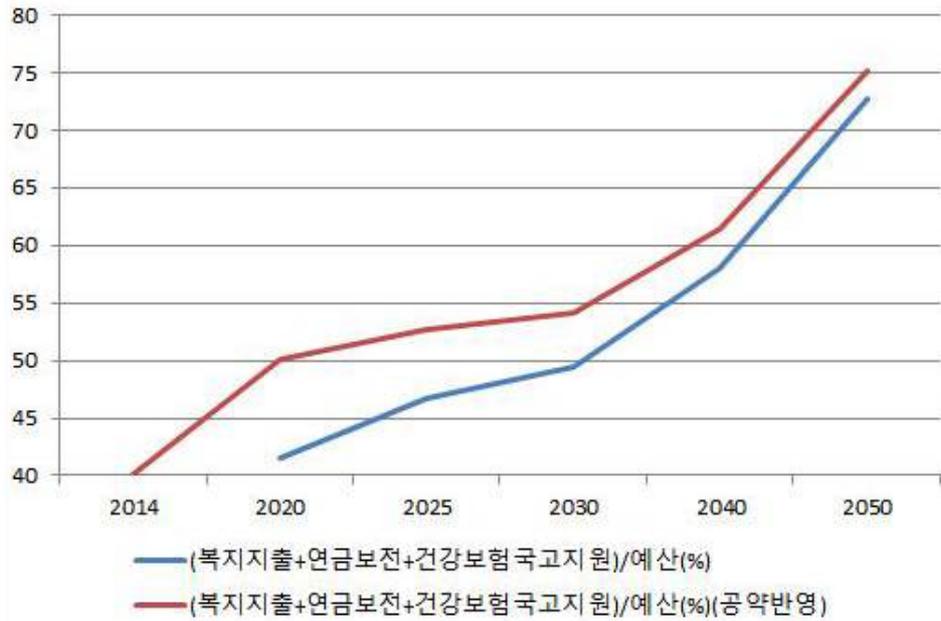
우선 공약이 반영되기 전 복지지출+연금보전+건강보험국고지원/예산 비율이 2030년 경 50%를 돌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이 반영될 경우 그 보다 10년 빠른 2020년 경 50%를 돌파하고 2030년경에는 5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예산에서 복지관련 지출이 50%를 넘어선다는 것은 공공행정, 국방 등 경직성이 큰 지출을 고려하면 사실상 예산운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재정이 이번 대선 공약들이 반영될 경우 대략 2030년 전후해서, 빠르면 그보다 일찍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공약 전후 복지지출+연금보전+건강보험국고지원 소요액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2014) 및 각 공단자료 이용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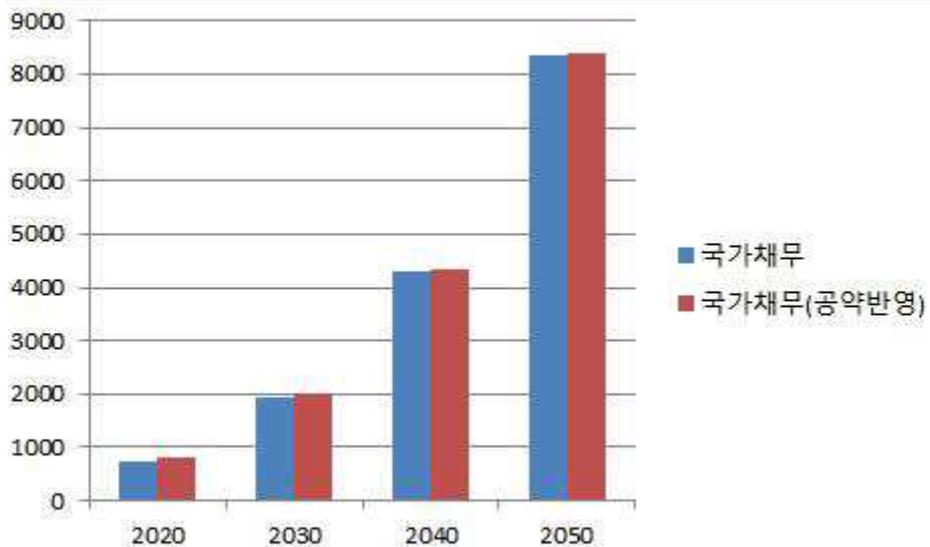
【그림 2】 공약 전후 복지지출+연금보전+건강보험국고지원/예산 비율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2014) 및 각 공단자료 이용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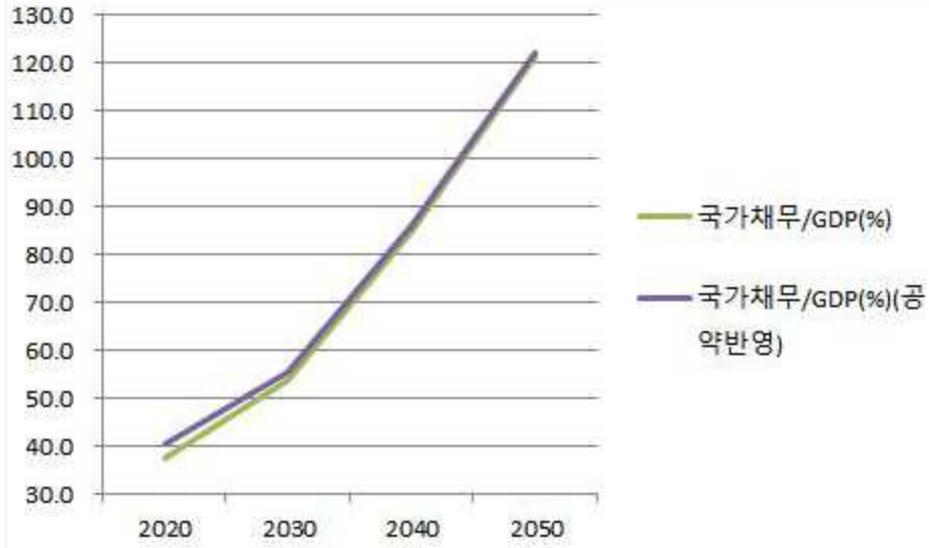
공약 반영 전후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도 2020에 37%에서 40%로, 2030년에 54%에서 55%로 증가해 재정운용에 부담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공약 전후 국가채무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2014) 및 각 공단자료 이용 계산

【그림 4】 공약 전후 국가채무/GDP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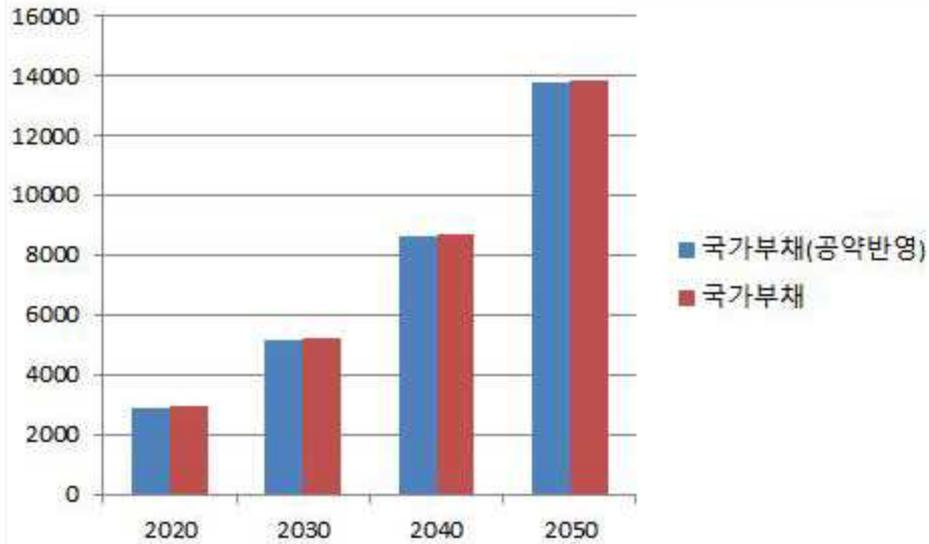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2014) 및 각 공단자료 이용 계산

【그림 5】 공약 전후 국가채무/GDP 비율 비교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국가채무/GDP(%)	37.4	53.6	85.1	121.3
국가채무/GDP(%, 공약반영)	40.5	55.3	86.3	1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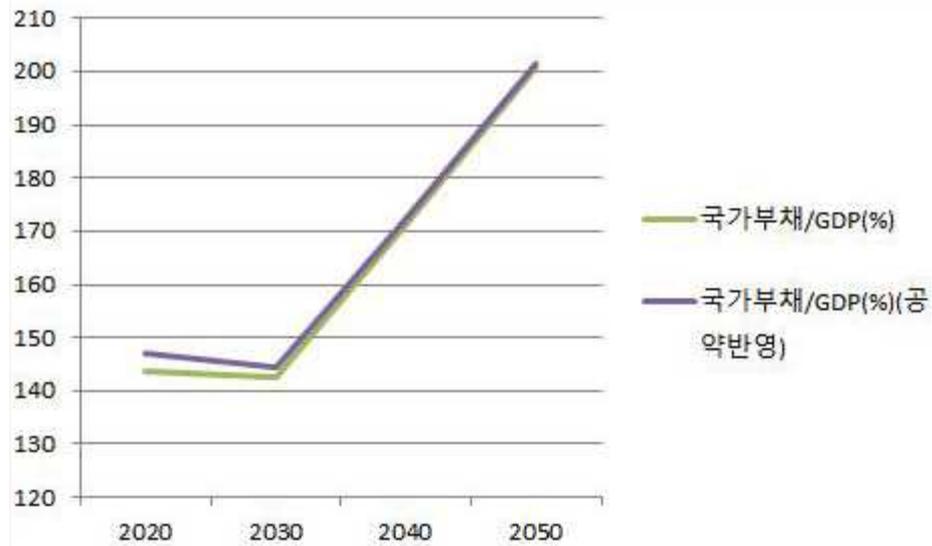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장기충당부채, 준공공기관부채, 한은통안증권 등을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의 대GDP 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 위험수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포퓰리즘 공약이 시행될 경우 더욱 증가해 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6】 공약 전후 국가부채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2014) 및 각 공단자료 이용 계산

【그림 7】 공약 전후 국가부채/GDP 비율 비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4-2060 장기재정전망(2014) 및 각 공단자료 이용 계산

이상의 분석은 잠재성장률이 변화가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거의 모든 후보들이 반기업정서에 편승해 공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재벌개혁이란 이름하에 기업투자를 옹호하는 규제조치들을 남발하고 일부 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그 결과 재정수입도 줄어들어 재정위기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우려가 있다. 또 일부 후보들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지급을 확대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고갈시

기가 더욱 앞당겨져서 2040년 전후에는 공적연금대란 공적보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번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지출은 늘리고 일자리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만들고 기업투자는 옹죄면서 법인세는 인상할 경우 한국은 머지않은 2030년 전후, 빠르면 그보다 전, 지금 30대의 청년들이 불과 40대가 되었을 때 심각한 재정위기와 연금 보험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선후보에게 바란다⑦>
대선공약을 통해 본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토론

먼저 공공부문 200만명이 400만명 분을 먹는 구조 고쳐야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1. 정책 수립의 기본 수순은 유럽 소국들이 주도하는 OECD 평균과의 격차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한 공공/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가 먼저임. 이 역시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함. 그 다음에 공공/사회 서비스 공급 방식, 즉 직 고용, 보조금, 바우처, 민간위탁, 경쟁입찰 등을 고민하고, 이어 효과적인 규제, 감독 등을 고민해야 함.

2. 일본과 한국은 총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거의 비슷한데, 일본의 GDP 대비 정부지출은 39.8%로 한국의 25.9%(2014년 기준) 보다 훨씬 많음. 공공사회복지 지출도 일본은 23.06%, 한국은 10.36%(2016년 기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숫자나 노동강도(과로사 등)가 논란이 되지 않음. 공공서비스가 너무 저열하다는 얘기도 없음. OECD평균을 근거로 공공부문 고용을 확 늘리자는 얘기도 일본에는 나오지 않음. 왜 일본에서 배우지 않는지?

3. 한국은 고용 문제의 핵심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 되어 있음. 문제를 고용불안, 좋은 일자리 부족, 비정규직 과다로 규정하다보니 천만개가 넘는 나쁜 일자리를 그대로 놔두고,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81만개 창출 정책으로 건너뛴. 고용형태를 문제 삼으니, 콜센터 등에서는 비정규직 보다 못한 정규직이 양산 됨. 비정규직(고용형태) 시비는 전환만 되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음.

한국 고용 문제의 핵심은 10~20년 전에도 130~150만원 받았는데, 지금도 그 금액 그대로 받는 저임금 근로자들임. 또한 사람값이 실력이 아니라 직장에 의해 천양지차가 나는 직장계급 사회, 연공계급사회, 공공양반사회임. 좋은 일자리 81만개 창출이

아니라, 나쁜 일자리 810만개를 그런대로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

4. 문재인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에 총 24조원이 소요 된다고 추정함. 그 중 공무원 일자리 17만개에 총 4.2조원이 소요된다고 추정함.

2017년 기준 9급 1호봉의 월 기본급은 139만3500원으로 기본급은 1672만2000원. 여기에 총 30여 가지 수당이 붙는데, 거의 다 지급되는 주요 수당은 명절휴가비 167만2000원 정액급식비 156만 원 교통비 144만원, 직급보조비 150만 원, 연가보상비 5만3340원 성과상여금(기준액) 198만3600원, 복지포인트(최소액) 50만 원, 연가보상비 등임. 월 60시간까지 가능한 시간외 근로수당은 587만4480원임. (서울신문의 [대한민국 공무원 리포트]에 따르면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5.1시간임) 이 모든 수당을 다 합친 9급1호 봉의 세전 임금 평균은 2500~2600만원이라는 것이 정설.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이 빠져있음. 그런데 기본급에 비해 1.5배 이상 지급하는 실 급여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호봉제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금임. 한국 공무원 보수 체계의 최대 매력이자(공무원 입장), 최대 패악(국민 입장)은 초임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이 3배 이상 상승하는 가파른 호봉제와 경직된 고용과 평균 수명 70대에 연이율 7%에 공무원 임금이 진짜 박봉이던 시절 만든 후불 임금 성격의 후한 공무원연금임.

매 5년 마다 실시하는 '공무원 총 조사(2013년)'에 따르면 2013년 6월 기준 평균공무원은 연령은 42.2세(여성37.6세), 16.1년(여성12.2년) 재직에 호봉은 남성 7급 18호봉. 2016년 기준 공무원 일반직 평균인 7급 18호봉은 월 298만9700원, 연 3587만6천원인데, 2016년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491만원, 연 5892만원임. 그런데 여기에는 1인당 평균 100만 원 가량의 복지 포인트와 130만 원가량의 직급보조비가 빠져있고, 연금부담분이 빠져 있음.

2014년 기준소득 월액 평균이 447만원(연 5364만원)이던 시절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의 '2015년 서울시 자치구예산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공무원 29,047명의 1인당 현금성 지원 금액(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사용자측 연금부담분 포함)은 7700만원이었음. 2016년에는 8천만 원이 넘었을 것임. 여기에 연금 적자 보전금 연 평균 10조원(1인당 1천만 원)을 얹으면 9천만 원고, 사무공간, PC, 전기, 수도 등 인력운영에 따른 경상비를 포함하면 1인당 1억 원 소요된다고 보

아야 함. 한국 고교생들의 로망이 공무원이고, 고시공시 경쟁률이 100대 1인 이유도, 공공부문이 청년인재와 기업가정신의 블랙홀이자, 수많은 고시공시 낭인 제조기인 이유도 여기에 있음.

공무원 17만 명은 30년 평균해서 연 4.2조원이 아니라 연17조원(1인당 1억 원)이 소요된다고 보아야 함.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64만 명은 30년 평균 연봉 4000만원(제수당 포함)+사회보험료+ 최소한의 경상비(사무공간, 집기, 식비 등)를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평균 5천만 원은 된다고 보아야 함. 이 계산이 맞다면 매년 총 32조원이 소요됨. 따라서 공무원 17만 명 17조원+ 공공부문 64만 명 32조원을 합치면 49조원임.

이른바 4대강 공사가 4년에 걸쳐 22조원(연평균 5조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감안하면, 30년 평균 거의 50조원이 드는 이 공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약인지 알 수 있음.

5.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무서운 것은 다른 큰 공약과 달리 (누가 집권해도 여소야대에 선진화법까지 있는) 국회의 동의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냥 실행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

6. 문재인 측근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사회안전망의 하나라고 얘기 함. '사회적 안전망(복지)을 확대하는 방식과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리는 방식은 상호 대체 가능'하다면서, '국내 가계가 직면한 소득과 소비 감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함.

그런데 50조원은 810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600만원(월 50만원)씩 근로장려세제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 돈임 30조원이라면 500만 명에게 연 6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임. 사회안전망이나 내수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더 정의롭고, 효율적인지는 긴 말이 필요 없음.

7. 공공부문이 모범(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임금복지 향상) 보이면 민간부문이 따라 할 것이라는 주장(국회 청소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례)도 소가 웃을 얘기. 세금과 독점 요금이 주 수익원 인 곳에서 근로조건을 향상하면 세금과 독점 요금을

납부 해야 하는 민간부문이 뒤따른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날 것임.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을 올릴수록, 이들을 세금과 요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민간부문의 고용사정은 더 나빠질 것임.

대선공약과 재정건전성

오 문 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 p1. 밑 11~9; 이러한 문제 때문에~차선책이 아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로 대체된 것이 다수국민의 의견이 수렴되더라도 수렴된 의견이 국가전체의 공동선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어서 직접민주주의의 민주성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대의민주주의를 창출했다는 표현은 동의하기가 힘들다. 대의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되자 효율적인 운영의 문제를 실현하고자 차선책으로 채택되어진 것이다. 만약 필자의 주장처럼 다수국민의 의견이 공동선으로 갈수 없다면 반대로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다수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지 않는 bias가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 다수국민의 의견이 공동선으로 갈수 없다면 이 문제는 사회현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선진화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 대선공약(公約)중 복지정책은 필수적으로 재원을 수반한다. 고수준의 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대선주자는 이에 걸맞는 재원의 확보정책을 같이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귀에 솔깃한 복지정책을 언급하는 대선주자가 이에 대한 재원확보책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권자입장에서도 혜택이 많은 복지정책의 제공을 바라면서도 이에 대한 부담문제에 대하여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 확실한 것은 좋은 조건의 복지혜택을 제시하는 후보자의 재원확보책에 대하여 유권자가 신중한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재원확보책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자를 가려내어야 한다. 이러한 후보는 장밋빛 공약을 통하여 당선되더라도 대선캠페인 기간에 제시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솔직하지 못한 후보가 되거나 만약 지키게 된다면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무책임한 후보가 될 것임은 명백하다.

- 우리는 포퓰리즘이 선거철에 더욱 난무하고 유권자를 현혹시키고 있음을 많이 목도해왔다.

- 선거에서 조세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고,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조세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상(理想)적인 선거환경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명한 유권자가 필요하다. 현명한 유권자의 존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다. 현명한 유권자라 함은 유권자 각자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조세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를 말한다. 유권자측면에서 단순히 생각하면 세금부담을 늘이겠다는 후보자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 유권자들은 국민복지수준을 올려주는 바라면서도 세금부담에 대하여는 모른 채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순적인 행태이다. 혹자(或者)는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조세지출을 줄임으로서 세수증가가 가능하고 정부지출에서 방만한 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도 세수증가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증세를 하지 않고도 국민복지수준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세지출을 줄이는 것도 넓은 의미의 증세여서 증세를 한 것이고, 방만한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은 늘어난 재정지출을 메꾸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증세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 자체로 합리적 지출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논의의 차원이 다르다.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조세지출을 줄여 실질적으로는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명한 유권자는 재정지출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유권자이다. 복지지출의 증가와 조세부담의 증가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붙어 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유권자이다. 자신에게 단지 조세부담이 감소하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아니고, 자기의 세금이 증가하더라도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가 현명한 유권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솔직한 후보자가 필요하다. 솔직한 후보자는 후보자의 공약이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더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이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려는 후보자다. 이렇게 하다가 선거에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소신을 지키는 후보자가 솔직한 후보자다. 솔직한 후보자는 현명한 유권자를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현명한 유권자가 다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솔직한 후보자는 선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두려운 후보자는 선거에 승리하기 위하여 솔직한 후보자가 되는 길을 택하기 보다는 포퓰리즘(populism)을

부추기는 후보자의 길을 택하려고 할 것이다. 솔직한 후보자는 자기의 소신을 지키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셋째는 현명한 유권자가 솔직한 후보자를 지지하여 솔직한 후보자가 선거에서 이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후보자는 포퓰리즘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유권자에게 추가적인 조세부담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당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례가 많이 생겨날수록 우리의 선거풍토에는 포퓰리즘, 무책임한 조세공약은 발을 붙이기 힘들 것이다.

경험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다. 공약은 선거에 승리하고 나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많은 부분 폐기처분되며, 심지어는 원천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을 공약(公約)으로 내거는 일도 상당수 있다. 대한민국의 앞날은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한 유권자가 많을수록 국가의 미래는 밝아진다. 하지만 개인의 사익에만 얽매이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솔직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현명한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현명한 유권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솔직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일이 일반적이 되며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수록 후보자는 포퓰리즘에 당선을 기대하는 일은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선거공약의 논리적 정합성은 유권자가 공약을 점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는 조세와 관련한 공약은 더욱 그렇다. 이상과 현실은 항상 차이가 있지만 현명한 유권자, 솔직한 후보자, 솔직한 후보자가 빈번히 당선되는 바람직한 선거생태계가 구축되는 것이 포퓰리즘이 발붙이기 힘든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비비앙3차 6층(순화동)

Tel : 02-741-7660~2

Fax : 02-741-7663

<http://www.cubs.or.kr>